

“쿠데타 준해” vs “정면 싸울것”...경찰국 신설 논란 확산

이상민 “경찰서장 모임 특검그룹이 주도...12·12도 그렇게 출발” 민주, 태스크포스 당 차원 기구 격상하며 전면전 나서 경감·경위급 전국팀장회의에 지구대장·파출소장 참여 움직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회의가 열린 데 대해 정부가 강한 어조로 유감을 표명했고, 더불어 민주당은 정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에 전면전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어 공세에 나섰다. 일선 경찰들의 발반도 거세지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회의가 열린 데 대해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그 후속 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는 특검 그룹이 있다”며 “하나회가 그렇게 출발했고, 12·12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찰국 신설 취지와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을 정권의 경찰 장악 의도로 규정하고 당장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열부터 정비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라며 “경찰 장악 관련 기구를 TF(태스크포스) 수준에서 당 차원 기구로 격상시키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그간 TF로 구성돼 있던 ‘윤석열 정부 경찰장악 저지대책단’을 당의 공식기구인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로 재편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상황에서 민주당 역시 정부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수준을 높인 셈이다.

조오섭(광주 북구갑)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독재로 회귀하려도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라며 “민주주의 후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책단을 중심으로 소관 상임위원 행안위에서부터 단계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국회 소문관에서 ‘윤석열 정부 경찰 장악 시도에 대한 입장 및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우선 행안위에서 대통령령인 경찰국 신설 관련 직제안의 적법성부터 따져 묻는다는 계획이다.

또 이날 말 열릴 것으로 보이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윤 후보자의 소신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보

인다. 한편 경찰 내부에서는 30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예정된 경감·경위급 전국팀장회의에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참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유근창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경감)은 25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30일 전국팀장회의에 전국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의 참석도 제안하며, 저부터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선 8기 광주시 첫 조직개편안 진통 끝 시의회 통과

다음달 1일 첫 인사도 단행

민선 8기 광주시 첫 조직개편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두 차례 심사가 보류되는 등 진통 끝에 25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원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체 심사를 벌인 결과, “조례안에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적지 않고, 의회와의 사전 조율 부족 등 소통에서 문제가 많았다”며 지난 20일과 21일 이를 연속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이러한 행자위는 시에서 제출한 개정안 가운데 일부를 수정·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행자위를 거쳐 업무가 집중된 신활력추진본부는 1개 과를 축소해 4개과로 조정됐고 신활력추진본부-광주전략추진단-기획조정실 간 기획 기능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기로 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군공항이전추진본부가 폐지되고, 강기정 광주시장의 공약 사업을 수행할 신활력추진본부가 신설된다.

환경생태국은 기후환경국, 여성가족국은 여성가족교육국, 도시재생국은 도시공간국, 교통건설국은 군공항교통국, 문화관광체육국은 문화체육실, 일자리경제실은 경제창업실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고 업무가 조정된다.

스마트도시담당관, 평화기반조성과, (군공항)이전사업과는 통·폐합되고 광주전략추진단, 광역교통과, 차세대산업과는 신설된다. 행정부시장 산하였던 청년정책관은 문화경제부시장 소속으로 한다. 조직개편안 통과에 따라 광주시는 곧바로 인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기자회견과 의 차담회에서 “조직개편안을 잘 통과시켜줘 시민, 의회에 감사하다”며 “개편안에 따라 시정이 차곡차곡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조만간 ‘안정 속 활력’을 기본으로 첫 인사도 하겠다”고 말했다. 인사 시기는 다음 달 1일(간부급)과 중순을 제시했다.

/최권원 기자 cki@kwangju.co.kr

주철현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 주체’ 법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사진) 국회의원이 25일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17조는 여러 아동학대 행위들을 열거하며 “누구든지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도록 해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일 법률 내에서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과 ‘누구든지’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가 다른 아동에 대해 학대행위를 범한 경우에도 「아동복지법」이 적용되는지 혼선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주철현 의원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한정된 부분을 삭제해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에 김주업 재선출

전남도당 위원장에 이성수

진보당이 제2기 지도부를 선출하고 본격적인 총선 태세로 전환한다.

진보당은 지난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당원 투표를 통해 윤희숙 상임대표를 비롯한 일반대표 3인, 노동, 농민, 청년 등 계급계층조직 대표를 선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시당위원장에는 지난 지방선거를 이끌었던 김주업 위원장이 재선출하고, 8개 지역위원장, 17개 현장위원장 선출 등 조직정비를 완료했다.

김주업 시장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은 광주에서 6명, 전국적으로 21명의 당선자를 배출 제3당으로 도약을 이뤄냈다”면서 “반드시 2024년 총선 광주지역구 당선으로, 2024년 원내 진출을 성사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

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오는 9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1만 당원자 당원 시대, 2024년 총선 원내진출’ 등을 준비한다.

전남도당도 2기 위원장으로 이성수 위원장을 선출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전남지역에서 지방선거를 통해 광역·기초의원 7명이 당선됐다.

이성수 전남도당 위원장은 “도민들이 만들어주신 전남 제1야당답게 도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정치, 진보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원 기자 cki@kwangju.co.kr

송갑석 “민주적 통제 필요한 건 윤석열 검찰공화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송갑석(서구갑·사진) 국회의원은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류삼영 총경의 대기발령 조치를 두고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것은 오히려 윤석열 검찰공화국”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며 경찰 통제를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영락없는 ‘검부독재’이자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또 “그동안 검찰은 어땠나. ‘검란’이란



말이 익숙할 만큼 검찰의 집단행동은 거침이 없었고 어떤 제지도 받지 않았다”며 “평검사회의만 따져봐도 2003년 이후 지금까지 7번의 집단행동이 있었으며, 차장검사, 검사장 등의 집단행동은 이루 셀 수도 없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